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농정이슈 보고서

11-06 2011/10/14

2011년 수확기 쌀값 인상 요인 분석 자료

목 차

- I. 자료 작성의 배경
- II. 2011년산 쌀값이 인상되어야만 하는 이유
- III. 결론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분과

- ※ 본 보고서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이 2011년 10월 5일 발표한 “2011년 수확기 인상요인 관련 분석자료”의 표현 및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발표하는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보도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070-7165-0017)이나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상희 정책조정실장(070-7165-0005, 77babsang@hanmail.net)에게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자료 작성의 배경

- 2011년 쌀 수확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인과 매입주체(농협 RPC 및 민간 RPC, 임도정업체)간의 쌀값 결정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수확기 적정 쌀값에 대한 대응 논리를 자료를 작성·배포함으로써, 수확기 쌀값 안정 및 쌀 경작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함

II. 2011년산 쌀값이 인상되어야만 하는 이유

1. 2011년도 쌀값은 10년 전과 동일한 가격임

- 쌀값은 10년 가격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대학등록금 및 물가 등은 엄청나게 상승하였음. 특히, 애완건 사료가 10kg에 4만원대를 육박하고, 껌값도 1kg 기준으로 1만원을 넘는 현실에서 쌀값은 애완건 사료나 껌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임

(표 1) 주요 품목 가격상승율

주요 품목	가격 상승 내역
대학등록금	2000년 기준, 국립대는 95%, 사립대는 68% 인상
짜장면값	2000년 2,000원 ⇒ 5,000원(250% 인상)
기타	애완건 사료 : 10kg ⇒ 4만원, 껌값 : 1kg ⇒ 1만원
쌀값 (80kg 기준)	2000년 153,000원 ⇒ 155,000원(1.3% 인상)

2.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쌀값이 너무 낮게 형성됐음

- 공산품은 기업이 생산해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되는 “원가 베이스” 가격 결정 방식인데 반해,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쌀값 인하 정책은 왜곡되어 낮은 쌀값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특히, 시장 원리에 의해 쌀값이 결정되는 구조 하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공비축미(2009년산 구곡)을 방출한다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저가의 공공비축미 방출로 인해 쌀값이 폭락한다면 예상 밖의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변동형 직불금 과다 지급), 당해 연도 수확기에는 RPC 등이 원료곡 매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차기 연도에 공공비축 및 자체 수매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발동)

<정부의 인위적인 쌀값 인하 정책 사례>

(3.11) 정부 비축 쌀 6만 1천톤 3월중 판매

- 쌀값 동향에 따라 필요시 추가 공매 검토 -

- RPC의 벼 재고량이 전년보다 245천톤 수준 감소,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산물매입비 50천톤 등 61천톤을 이달부터 RPC 등 산지 가공·유통업체에 판매
- 향후 쌀값이 과거 5개년의 분기별 평균 가격보다 3% 이상 상승할 경우 공매 방식으로 판매할 계획

(4.29) 정부쌀 「'10년산 3만톤, '09년산 20만톤」 추가 공매

-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부족 해소와 단경기 쌀값 오름세 완화를 위해 5.6 정부쌀 중 '10년산 3만톤과 '09년산 20만톤을 공개경쟁입찰(공매)를 통해 방출

(5.18) 쌀값 안정을 위해 '09년산 정부비축쌀 판매 확대

- 공공기관 구내식당 '09년산 쌀 사용 -

- 쌀값 조기 안정과 정부쌀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9년산 쌀 판매 확대
- 또한, 5.6일에 이어 5.19일 '09년산 쌀 20만톤을 추가로 공매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쉽게 민간대형유통업체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09년산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09년산 쌀을 매장에 진열 판매해 주도록 요청
- '09년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종합청사(중앙, 과천, 대전)와 각 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 '09년산 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진

(6.3) 09년산 정부쌀 5만톤 10일간 정가 판매

- 단경기(7-8월)를 앞두고 쌀값 안정 기조 정착을 위해 '09년산 정부쌀 5만톤을 5.19일 공매 평균낙찰가격인 26,180원/40kg(조곡)에 정가 판매

(7.1) '10년산 정부쌀 8만톤 10% 싸게 판매

- 밥쌀용 수입쌀도 20%이상 인하하여 판매 -

- '10년산 정부쌀 8만톤을 실수요업체에 정가로 할인 판매
 - 쌀 소매업체와 할인판매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도정업체를 대상
 - 공급가격 조곡 46천원/40kg, 소매업체 소비자 쌀 4만원/20kg이하 판매 조건
- 밥쌀용 수입쌀 가격도 20%이상 인하하여 7.4일부터 판매
- 농협매장 할인 판매 및 산지유통업체 납품가격 인하 유도 등

(7.15) '물가 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지원계획' 공문 발송

- (사)대한곡물협회, (사)양곡가공협회, 농협중앙회, (사)RPC협의회 발송 -

- 이달부터 2010년산 쌀을 해당 RPC의 6월20~30일 평균 판매가격 대비 3% 이상 인하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RPC에 수확기 대책자금 중 1,000억원을 지원

3. 통계청 발표 생산비의 현실화가 절실함

- 현장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쌀 생산비와 통계청의 쌀 생산비 조사간의 가장 큰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요소는 자가노동비와 간접생산비였음
- 우선, 자가노동비에 대해 통계청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가노동비를 단순 농촌 노임으로 계산함으로써 쌀 경작농가의(자가농, 임대농) 경영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쌀 농가는 벼 수확 이후 최종 판매로 얻는 소득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 경영자의 역할을 도맡아야 하는 입장에서 모든 위험 요소를 감안하여 경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가 노동을 농촌 지역 단순 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즉 통계청의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은, 재벌 총수나 CEO에게 적용되는 보수(급여) 산정과 일반 회사 평직원의 급여 산정 간의 차이를 무시한 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는 데 있음

- 아울러, 자가노동 시간도 단순히 벼농사에 종사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영농을 위해 필수적인 기획 및 교육 등을 위한 시간(농약, 비료 등 생산요소 구입시간, 영농 상담 및 기술교육 등, 영농일지 기록)까지 일종의 기회비용으로써 제대로 반영해야 마땅함

- 이처럼 정부(통계청)가 자가노동(시간, 노임)을 낮은 수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논벼 순수익율은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미국·일본 등은 총 수입과 생산비가 동일하거나 생산비가 총수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만약 논벼 순수익율이 30%를 상회하고 있다는 통계청 주장이 사실이라면 논벼 재배면적은 대폭 확대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데, 실제 논벼 재배면적은 2005년 98만ha에서 2010년 89만 2천ha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또한, 간접생산비 산정 기준도 너무 낮게 산정하였는데, 발작물 가격 인상, 기업 등의 당기순이익 증가, 국민소득 향상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표 2) 논벼(쌀) 생산비 (단위 : 원, kg, %)

구 분	2009년	2010년	증 감	증감률
□ 10a당 논벼 생산비	624,970	614,339	-10,631	-1.7
○ 직접생산비	371,144	371,513	369	0.1
- 종 묘 비	12,139	12,719	580	4.8
- 비 료 비	53,916	47,982	-5,934	-11.0
- 농 약 비	28,149	29,057	908	3.2
- 기타재료비	11,560	11,885	325	2.8
- 농 구 비	46,805	45,841	-964	-2.1
- 노 동 비	97,095	100,335	3,240	3.3
- 위탁영농비	110,294	111,961	1,667	1.5
- 기 타*	11,185	11,733	548	4.9
○ 간접생산비	253,826	242,826	-11,000	-4.3
- 토지용역비	225,441	214,576	-10,865	-4.8
- 자본용역비	28,385	28,250	-135	-0.5
□ 10a당 부산물생산비	19,159	20,173	1,014	5.3
□ 80kg당 쌀 생산비	90,758	98,413	7,655	8.4
□ 10a당 쌀생산량**	534	483	-51	-9.6

* 기타 : 영농광열비, 영농시설비, 수리비, 조세 및 기타비용

** 자료출처 :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4. 쌀 직불금 제도에 대한 오해

-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쌀 직불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쌀값 투쟁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함
- 우선, 쌀 직불금을 통한 소득 보전은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국 평균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실제 가격 하락보다 적은 직불금을 수령받고 있음
- 실제, 2005년 쌀 대란 당시 전국 평균 쌀값은 가마당 약 14만원이었지만 전남 지역의 쌀값은 13만 1천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음. 당시 전남 지역 쌀값은 전국 평균 쌀값에 비해 가마당 약 9천원이 낮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소득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남 지역 쌀 농가들은 1,070억원¹⁾의 손실을 입은 것임

1) 계산식 : 11,188,000/80kg(당시 전남도 생산량)×9,000원(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

(표 3) 산지 쌀값에 따른 총 수입액 변동 추이 (단위 : 80kg/정곡)

지역	산지 쌀값	목표가격	고정형직불	변동형직불	총 수입
A	170,000	170,083	11,475	5,595	181,558
B	150,000	"	"	5,595	167,070
C	140,000	"	"	5,595	157,070

가정1 : 전국 평균 쌀값 150,000원/80kg 정곡 기준

- 아울러 쌀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 보전 대책이 전무하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음.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10a당 조곡 생산량이 534kg에서 483kg으로 감소함에 따라 쌀 농가들의 소득 감소액은 8,529억원에 달하였음²⁾
- 이처럼, 쌀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쌀값 하락분에 대한 소득 지지를 못하고 있고,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도 전무하기 때문에, 쌀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소득지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5.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쌀값 현실화가 필요함

- 2/4분기 정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물가 상승률이 4.75%에 달하였고, 대학등록금은 10년 전보다 100% 인상되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논벼 생산비마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인정하고 있어 농가들의 지출요인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소득이 2만불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늘어나, 2006년 78.2%에서 2008년에는 65.3%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쌀값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적절한 인상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대책이 필요함

2) 계산식 : $(534\text{kg} - 483\text{kg}) \times 10(\text{ha환산}) \times 892,000\text{ha}(\text{전체 생산량}) \div 80 \times 150,000\text{원}/80\text{kg}(\text{평균 쌀값})$

Ⅲ. 결론

- 우선 통계청의 쌀 생산비 조사 기준 및 결과는 현장은 물론 전문가들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가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쌀 생산비는 통계청보다 훨씬 높는데 반해 현재 쌀값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음

- 결론적으로 각 지역마다 쌀값은 여러 요인(임차료, 지역 평균 쌀값, 노동비 등)으로 인해 천차만별이지만, ▲과거에 비해 너무 낮은 쌀값 인상을 ▲쌀값 하락 및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 미비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왜곡된 낮은 쌀값 형성 ▲농가들이 삶의 질 향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쌀값 현실화와 함께 실질적인 쌀 농가 소득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